
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
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

2021. 7. 5.



I. 검토배경

-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국제교역의 증가와 함께 그간 항만인프라*와 물동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만 근로자의 작업여건 취약

* 선석, 부두, 크레인 등 항만하역장비, 임항창고, 항만배후단지 등

- 항만근로자는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맞춘 작업, 24시간 교대근무, 높은 작업강도 등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

구 분	2010	2015	2019	2030(전망)
물동량 (백만톤)	1,204	1,463	1,644 (‘10년 대비 36.5% 증가)	1,957
선석 수 (개)	765	828	972 (‘10년 대비 28.1% 증가)	1,059

- 최근 연이은 항만 근로자 재해로 항만안전에 대한 사회적·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, 항만 안전관리체계 재검토 요구

< '21년 항만 내 근로자 안전사고 주요 발생현황 >

- '21.4.22. (평택항) 평택신컨테이너터미널 창고 내 작업 중 개방형컨테이너 부딪힘 사망사고
- '21.5.23. (부산 신항) 웅동배후단지 노무자 퇴근 시 리치스태커 뒷바퀴 치임 사망사고

- 항만하역업의 경우 재해율 등이 전 산업 평균 이상*임에도 불구하고, 그간 산재사고가 빈번한 건설업, 제조업에 비해 예방·감독이 소홀

* **사고재해율(%)** (전 산업) 0.48('18)→0.50('19)→0.49('20) (**항만하역**) 0.61→0.66→0.68
사고사망만인율(‰) (전 산업) 0.51('18)→0.46('19)→0.46('20) (**항만하역**) 2.06→0.82→0.86

- 항만은 국가소유의 기반시설인 만큼 노동·항만당국이 함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과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필요

<대통령 지시사항(5.13. 평택항 사고로 사망한 故 이선희씨 관련)>

“이번 사고가 항만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,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.”

4. 항만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

1 항만출입자 안전교육 의무화

가. 현 황

- 항만사업장에는 하역업, 항만용역업(줄잡이, 화물고정 등), 컨테이너 수리업 등의 다양한 상용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출입, 작업을 수행
 - 「항만운송사업법」상 안전교육 의무 업종인 항만하역업, 항만용역업(줄잡이, 화물고정) 근로자 외에는 별도의 안전교육 미시행
- * 평택항 재해사고 이후, 해수부 주관 전국 항만의 상시출입자,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업계 근로자 약 6.4만여 명 대상 특별 안전 교육 실시(~6.30)

나. 개선방향

-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, 항만출입증 발급(재발급)과 연계하여 교육 이수율 독려
 - * 안전교육 의무 업종(항만하역업, 줄잡이업, 화물고정업) 근로자는 별도 확인 조치
 - (상시출입증) 기본 교육 콘텐츠* 개발 후, 신규 신청자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발급, 기존 발급자(6.4만 여명)는 1년 내 재발급 조치
 - * 항만근로자 '기본 안전교육' 콘텐츠(동영상, 교재) 개발(3시간 수준)
 - (임시출입증) 항만 내 '필수 안전수칙' 교육 이수 후 출입증 발급조치
 - * 항만 내 '필수 안전수칙' 교육콘텐츠(영상, 리플렛 등) 개발(15분 수준)
- 하역, 검수·검량, 줄잡이, 화물고정 등 업종별로 특화된 작업 교육 과정을 개발, 해당 근로자 교육 실시
 - 특히, 신규근로자 맞춤형 교육과정*도 개발, 위험에 대한 인지도 제고
 - * 직종별 재해다발 원인(기인물, 시간대, 발생형태 등), 재해예방수칙, 안전작업방법 등

다. 추진 일정

- 항만출입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, 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교육 시행('21.10)
- 항만산업 업종별 특화된 작업교육과정 개발, 교육 시행('21.10)
-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('21.10)

가. 현 황

- 항만 내 대부분의 작업이 선박 입출항 스케줄에 맞춰 처리되고 있어, 안전보다 효율성을 우선하는 작업문화가 팽배
 - 영세한 항만연관사업체 난립, 항만사업장 내 안전 총괄관리자 부재 등으로,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
- 컨테이너 수리, 급유 등의 경우, 선사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, 영세업체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 만연
 - 뱀질식 수리 등 서비스 품질 저하, 안전설비투자 저해 등 안전의 위해요인으로 작용

나. 개선방향

-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장비(안전모, 안전조끼) 착용 의무화 (미착용자 항만출입 금지, 3개월 계도기간 이후 전국 항만 적용)
 - 항만 내 화물트럭, 지게차 등 중장비의 철저한 속도제한* 시행 (미준수자에 대한 일정기간 항만출입중 회수 등 패널티 부여)

* 에이프런 등 하역 작업장 내 10km/h, 통행구간 30km/h 기준

- 항만종사자 모두 함께 참여하는 ‘항만안전문화 주간’ 운영(반기별 1회 이상) 및 ‘항만종사자 가족 안전 캠페인’** 개최 등 안전문화 확산

* 우수 안전항만 및 안전관리자 선정, 재해예방조치 우수사례 및 주요 재해사례 공유, 항만안전점검관 및 사업체의 안전관리자 정기 세미나 개최 등

** 예시) 인천항의 경우 매년 ‘항만종사자(항운노조, 하역사, 연관기업 종사자, 인천 해수청, 인천항만공사 직원) 및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(인천항의 날)를 개최 중으로, 해당 행사 시 ‘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 캠페인’ 추진

- 부두운영회사(TOC)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평가항목에 안전관리 분야 비중을 강화, 사고 빈발업체 퇴출 등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
 - 부두운영회사(TOC) 성과평가 항목의 안전분야 비중 2배 상향(10%→20%)
 - * 부두운영회사(TOC) 계약갱신 평가기준(지침)에도 안전관리 분야 신설(20%)
 - ** 민자부두는 평가실익이 없는 점(30~50년 임대계약)을 감안, 항만시설운영사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이행의무 부여('항만안전특별법' 제정과 연계)
 -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분야 신설,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임대료 상향, 입주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추진
- 인건비 위주 항만서비스 업종*의 직무분석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도입, 영세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및 가격 덤핑 강요 등 차단
 - * 컨테이너수리업, 항만용역업(화물고정, 줄잡이 등) 등

다. 추진 일정

- 항만출입자 안전장비(안전모, 안전조끼) 착용 의무화, 항만 내 차량·중장비 속도제한 단속(3개월 계도기간 이후, '21.9~)
- 항만안전문화 주간 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('21.7~)
- 항만사업체 평가 시 안전관리 분야 강화(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개정, '21.7/ 항만법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, '21.下)
- 항만서비스 업종 표준계약서 도입('항만운송사업법' 시행규칙 개정, '22.上)
 - * '항만서비스 산업의 직무분석 및 표준계약서 개발' 용역 추진

6.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일정

구분	내용	'21.6	'21.7	'21.8	'21.9	'21.10	'21.11	2112	221	222	소관	
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	▶항만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	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정									해수부	
	▶중·소형 항만 서비스업종 신설	항만별 특성을 감안한 표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마련 등										
항만사업장 안전 기준 강화	▶안전관리자 다량 배치	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									고용부	
	▶항만 하역작업 안전기준 강화	실태 조사 및 연구용역 수행			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					해수부, 고용부	
	▶노후 하역장비 정비 및 안전진단 제도 도입	업계 의견수렴 및 현황 조사,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개정							「항만법」 개정, 기술기준 마련 연구용역		해수부	
항만 상시 점검 체계 구축	▶항만안전 패트롤카 제도 운영					패트롤카 상시 순찰						고용부
	▶상시 감독체계 구축			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실시, 근로감독 연계 산업안전 점검 매뉴얼 반영 등								해수부, 고용부
상설 항만 안전협의체 구성	▶합작근거 마련	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정									해수부	
	▶항만안전협의체 내 합작이행의무 명시	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, 국가(항만공사)-하역사간 계약 갱신 시									해수부	
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	▶항만안전점검관의 법령 근거 마련	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정									해수부	
	▶항만안전점검관 채용 및 현장배치	「항만안전특별법」 시행령 제정									해수부	
컨테이너 안전 관리 체계 개선	▶불량컨테이너 상시점검	불량컨테이너 상시 점검(계속)									해수부	
	▶안전점검사업자 등록제 도입, 교육제 마련	「선박안전법」 개정									해수부	
	▶컨테이너 신고 세분화 등	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(Port-Mis) 반영									해수부	
	▶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등 마련	고시 개정 및 국제협약 개정 제안 등									해수부	
FR 컨테이너 작업 안전성 확보	▶가이드 작성, 체계를 통해 중점 지도	가이드 작성, 배포 상시점검 등 지도										해수부, 고용부
항만출입자 안전 교육 의무화	▶항만출입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, 교육 시행	안전교육 콘텐츠 개발				출입증 발급과 연계, 교육 시행				해수부		
	▶업종별 특화 자료 개발, 교육 시행	업종별 교육과정 개발				교육 시행				고용부		
항만 안전 문화 확산	▶항만출입자 안전의식 함양	계도 및 홍보			의무화 시행							해수부
	▶항만안전문화 주간 행사행	항만별로 즉시 시행하되, 예산수반 사업은 예산반영 일정에 맞춰 시행									해수부	
	▶항만사업체 평가 항목 안전관리분야 강화	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개정		항만법 및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							해수부	
	▶항만서비스업종별 지표 도입	항만서비스 업종별 직무분석, 업계 현황조사							제도 도입		해수부	
재해예방 시설 설치	▶재해예방시설 설치	전국 항만 전수조사 등							시설 설치 등		해수부	